

2013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

# 『 청 럽 음 부 즈 만 』 활동보고서



**KR 청 럽 음 부 즈 만**

# 목 차

* 청렴옴부즈만 인사말 및 프로필 .....	1
Ⅰ. 일반현황 .....	3
1. 설치 근거 및 운영 목적 .....	4
2.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	4
3. 추진 경과 .....	5
Ⅱ. 주요 활동 현황 .....	6
1. '13년도 활동 개요 .....	7
2. 주요 성과 .....	7
Ⅲ. '14년도 운영 방안 .....	12
1. '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13
2. '14년도 청렴옴부즈만 운영방안 .....	14
[부록]	
1. '13년도 청렴옴부즈만 회의 세부 운영 현황 .....	17
2. '13년도 청렴옴부즈만 우수사례 (Best Practice) 모음 .....	32

## 청렴옴부즈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위원회

“작은 것을 보지 못하면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見小者不明)는 말은 공공기관의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명심하고 실천하여야 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를 추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더더욱 위와 같은 자세가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갖고 있지 아니한 우리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공공기관보다도 철도시설재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혈맥을 형성하는 철도시설사업은 그것이 국토의 대동맥 사업에 해당하거나 싹틔줄 사업에 해당하거나에 관계없이 계획에서부터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시설의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 점의 부끄러움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한해 잦은 철도시설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관련 업체간의 유착 또는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따른 부패발생 등에 대한 의혹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3회 참관하고 현장설계변경심의 및 설계자문회의 운영제도 등 제도개선 8건을 함과 아울러 공익신고활성화방안 및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각각 4회에 걸쳐 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권고의 활동은 각각의 소임을 받은 우리 철도시설공단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청렴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자세가 현장에서 아무런 장애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청렴의지와 제도가 서로 화합하여 우리 공단이 건설한 철도 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청마가 질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렴옴부즈만과 철도시설공단은 힘을 합하여 우리 국토의 핏줄인 철도에는 한 점 불순물 조차 없도록 하여, 그 핏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신뢰로써 상호소통하고, 우리 국토의 지역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 청렴옴부즈만 프로필

성명	구분	내용
 <b>정준현</b> (학계)	현직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행정법) 교수
	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대 학장(2009~20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11~)
 <b>장범수</b> (토목분야)	현직위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장 (토질 및 기초공학 박사)
	주요경력	- 국토해양부 중앙설계심의위원 - 한국지반공학회 이사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이사
 <b>김경복</b> (시민단체)	현직위	일신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
	주요경력	- 서울 상공회의소 회계·세무 상담역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감사 - 좋은 예산센터 감사
 <b>이영일</b> (시스템분야)	현직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주요경력	- 한국토지공사 기술심의위원회 위원(2002~2008) - 제어로봇시스템 공학회 편집이사(2009~201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전산원장(2011~2013)
 <b>강현호</b> (토지보상)	현직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주요경력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2008~2009) -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2007~) - 한국행정법학회 기획이사(2012~)

## **I. 일반현황**

## 1. 설치근거 및 운영 목적

-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07.4.17.제정)
  - 옴부즈만의 운영 목적 및 권한과 직무수행 사항 등을 규정

### 운영 목적 및 권한

- ▷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공단의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
- ▷ 불합리한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규칙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관련 사항의 감사요구 및 시정 권고
- ▷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2.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 위촉 인원 : 외부전문가 5인
  - 공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 구성

분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現)
학계(대표)	오 준 근	오 준 근	정 준 현	정 준 현
시민단체	이 상 근	이 상 근	김 경 복	김 경 복
건설분야	류 정 수	류 정 수	장 범 수	장 범 수
시스템분야		김 우 제	김 우 제	이 영 일
토지보상				강 현 호

-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 옴부즈만 자격 요건
  - 건설공사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 이상 조교수로 3년 이상의 재직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보유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기업에서 1급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재직
  -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철도공단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 3. 추진경과

- '06. 0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공기업 ombudsman 제도의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
- '07. 03월 청렴계약ombudsman 도입계획 방침 수립
- '07. 04월 「청렴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정
- '07. 06월 제1기 청렴ombudsman 선정 및 위촉(3명)
- '09. 07월 제2기 청렴ombudsman 위원 확대(3명→4명)
- '11. 07월 제3기 청렴ombudsman 선정 및 위촉(4명)
- '12. 04월 청렴 ombudsman 지침 개정
  - ombudsman의 직무 및 권한에 부패행위관련 감사요구권 추가
- '13. 01월 '12년 청렴ombudsman 활동보고서 발간 배포
- '13. 06월 청렴 ombudsman 지침 개정
  - ombudsman의 직무 및 권한에 공익신고 관련사항 추가
- '13. 07월 제4기 청렴ombudsman 위촉(4명)
  - 제3기 위원 3명(정준현, 김경복, 장범수) 연임, 신규위원 1명(이영일) 위촉
- '13. 12월 제4기 청렴ombudsman 위원 확대(4명→5명)
  - 부패취약분야인 토지보상 분야 보강을 위해 신규위원 1명 추가 위촉(강현호)

기존 청렴 옴부즈만				+	신규 옴부즈만
법률	회계	토목	시스템		토지보상
정준현	김경복	장범수	이영일		강현호

## Ⅱ. 주요 활동현황

**1. 활동개요**

- (정례회의)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의 12회 개최 (16건 개선권고)
- (현장활동)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3회 참관

활동명	주요 활동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설계변경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제도개선(8건 개선권고)</li> <li>•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4건 개선권고)</li> <li>•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부패행위 내·외부 통제 강화(4건 개선권고)</li> </ul>
현장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여주 복선 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13.8.13)</li> <li>• 포항~삼척 제3~5공구 및 부산~울산 제2공구 설계변경심의 ('13.9.10)</li> <li>• 수서~평택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설계변경심의 ('13.10.17)</li> </ul>

\* 2013년도 청렴옴부즈만 세부 운영현황 참고 (붙임2)

**2. 주요 성과**

- 현장설계변경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제도개선 (8건 개선권고)
  - 건설공사 특성상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관련업체간 유착 또는 불투명한 업무 처리 등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상존
  - 설계자문, 설계변경업무와 관련하여 설계품질 향상과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개선 권고 >**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4건
  - 설계자문 지적사항 반영회신 명문화 및 원설계자 책임강화
  - 설계자문 심사기간 보장 및 3건 이하로 상정 등
- 현장설계변경심의 관련 4건
  - 설계변경 시 설계자 특허사항 배제
  - 설계변경 원인분석 및 피드백 강화
  - 설계변경 심의결과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조항

**【 설계자문위원회 및 현장설계변경심의 관련 권고사항 】**

권고 사항	조치결과
○ 설계 자문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문 위원에게 반영 여부 회신 명문화 (제53차 '13.1.15)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13.1.23 건설계획처-359호)
○ 충실한 설계자문을 위해 안건 상정 시 3건 이하로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5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권고 (제53차 '13.1.15)	
○ 설계에 대한 심의 시 위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 보장 (제53차 '13.1.15)	
○ 원 설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 (제53차 '13.1.15)	
○ 설계변경심의 위원회에서 1회 최대 2~3건 이상은 심의치 않도록 권고 (제53차 '13.1.15)	○ 현장설계변경 심의 현황 분석 및 대책('13.8.21 건설계획처-352호) ○ 현장설계변경 절차 및 지침 개정안 ('13.10.2 건설계획처-4160호) ○ 현장설계변경심의지침 최종 개정안 ('13.11.1 건설계획처-4648호)
○ 설계 변경시 설계자가 보유한 특허사항은 설계에서 배제하도록 절차서에 반영하도록 권고 (제53차 '13.1.15)	
○ 현장설계변경심의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피드백이 필요함을 권고 * 지침 제6조3항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및 명시)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 13년 현장설계변경심의 자료에 대해 샘플링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제60차 '13.7.16) ☞ 원인분석을 시행하여 연말 또는 연초에 백서를 발간할 것 (제61차 '13.8.27) ☞ 백서 발간은 나열식이 아닌 원인/유형별로 심도있는 분석자료가 되게 할 것 (제62차 '13.10.15)	
○ 현장설계변경심의운영 지침 제18조 - 설계변경심의결과서 검토 후 부실벌점 부과 요청 조항 (책임소재 규명 등)에 관한 권고 ☞ 관련 담당부장이 사전에 귀책사유 등을 먼저 검토하고 심의 위원에게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검증자료 제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 (제61차 '13.8.27) ☞ 제재조치에 대한 심의위원의 사전검토 의견 반영을 명확화 하는 권고안 제시 (제62차 '13.10.15)	

## ○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4건 개선권고)

- 철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정부의 국정과제(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모색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관계자 인터뷰 및 공단과 옴부즈만 협조체계 구축
- 협력사(하도급사 포함) 부패행위 제재 방안 검토

### < 개선 권고 >

-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공익신고 관련 감사요구 및 시정권고 부여
-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3건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공단 조치사항
  - 공익신고 범위, 신고대상, 접수~보상금 지급 처리절차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옴부즈만 권한 부여

### 【 공익신고 활성화 관련 권고사항 】

권고 사항	조치결과
○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제55차 '13.3.26) ☞ 다양한 공익신고 채널 확보 및 홍보 강화 ☞ 청렴옴부즈만의 활동범위 확대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 옴부즈만 지침 개정 (13.6.25 성과관리처-2212호)
○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기반마련 권고 (제57차 '13.5.21)	○ 공익신고지침 제2개정안 (13.7.11 경영성과처-186호)
○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개정안 검토 ☞ 규범형식, 침해행위의 범위, 신고대상, 접수절차, 공익 신고센터 설치,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해 보충사항 권고 (제62차 '13.10.15)	○ 공익신고지침 제3개정안 ('13.11.20 경영성과처-1639호)
○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개정안 ☞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이의 제기 시 옴부즈만의 확인절차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권도 마련할 것을 권고 (제3자를 통한 객관성 강화) (제64차 '13.12.10)	

○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부패행위 내·외부 통제 강화 (4건 개선권고)

- 반부패경쟁력평가 및 고위직 청렴도평가 관련 자료 검토
- 공단 퇴직자에 대한 취업 및 행위 제한사항 검토
- 전관예우 근절방안(설계 및 감리용역) 검토
- 공단 비리척결과제 검토

**< 개선 권고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맞게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의 구체성 확보
- 공단 퇴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조항 규정화
-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수정 권고

**【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권고사항 】**

권고 사항	조치결과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맞게 징계양정 기준 강화 (제57차 '13.5.21)	○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검토 중 (13.6.24. 경영지원처-3499호) - 직무관련 위법·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 중징계 적용 - 공금유용 및 횡령의 경우 징계양정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의 구체성 확보 ☞ 목적, 인원, 대상자 등의 정보를 포함해 공개 (제57차 '13.5.21)	○ 공개내용 구체화 및 공개대상 확대 (13.6.11 경영지원처-3226호) - 업추비의 목적, 대상, 장소 공개 -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 상임이사급 → 지역본부장 급까지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조항의 공단 자체 규정화 검토 (제59차 '13.6.18)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3.7.17 경영성과처-271호) - 퇴직임직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항 신설 • 부장 이상 직원 퇴직 후 1년간 직무 관련업체 취업 자제 권고 및 퇴직 전 자체 심사 ☞ 공직자 윤리법 보다 한층 강화한 조항 마련
○ 설계 및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수정 권고 ☞ 전관예우 근절 관련 항목의 완결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수정 권고 (제64차 '13.12.10)	○ 공단 경력의 실적인정조항 삭제 등 전체적으로 평가 기준이 완결성을 갖도록 계약처에 옴부즈만 권고사항 통보 ('13.12.16 경영성과처-1878)

## ○ 현장설계변경심의 운영 감시활동 (총3회)

- 설계변경심의 관련 제도개선(옴부즈만 권고)의 실제 현장 적용 확인
  - \*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여부 등
- 설계변경 및 설계자문 활동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감시활동 실시
  - \* 심의위원회 활동의 설계품질 강화 및 사업비 절감현황 모니터링 실시

주)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5항: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참관이 가능함

### 【 현장설계변경심의 참관 】



성남~여주 복선 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현장설계변경심의의 참관 ('13.08.13)



수서~평택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설계변경심의의 참관 ('13.10.17)

### **Ⅲ. '14년도 운영 방향**

**'14년 중점 운영부문(안)**

- ☐ 토지보상 제도개선시행 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 ☐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및 품질·안전점검 업무 부패직접 경험(향응·편의제공)에 대한 근절방안
- ☐ 내부 청렴도 악화에 따른 인사·예산(업무추진비)·부당업무 지시 근절방안
- ☐ 공단 비리척결 과제(경영개혁추진단, 비리척결팀) 검토 및 권고

**1. '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측정 대상기간: '12.7.1~'13.6.30)**

- 종합청렴도는 8.36점으로 0.14점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8.28점으로 0.44점 대폭 하락

구 분	평가점수(등급)			준정부 기 관 (86기관)	평균점수	
	'13년	'12년	전년 대비		준정부기관 (86기관)	전체기관 (653기관)
종합청렴도	8.36	8.22	+0.14	45위	8.35	7.86
- 외부청렴도	8.47	8.31	+0.16	59위	8.58	8.09
- 내부청렴도	8.28	8.72	△0.44	36위	8.14	7.93

-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0.16점 상승하였으나, 향응·편의제공 직접 경험 발생 및 토지보상분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99) 취약

구 분	평가점수(등급)			취약항목
	'13년	'12년	전년 대비	
계	8.47	8.31	+0.16	
토지보상	8.47	8.06	+0.41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시공·감리	9.04	8.12	+0.92	향응제공(4.5회/1명, 75.5만원) 금품·향응·편의간접경험(1명)
품질·안전	9.15	8.24	+0.91	편의제공(9회/1명)

- 내부청렴도는 8.28점으로 0.44점 대폭 하락하였으며, 부당한 인사·예산(업무추진비)업무 및 부당 업무지시 경험 발생

구 분	평가점수(등급)			취약항목
	'13년	'12년	전년 대비	
계	8.28	8.72	△0.44	
인사업무	8.16	8.47	△0.31	- 금품·향응 간접경험(4명)
예산집행	8.64	8.78	△0.14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경험(2명)
업무지시 공정성	6.65	7.88	△1.23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7명)

## 2. '14년도 청렴옴부즈만 주요활동 계획(안)

### ○ 활동계획

- '13년도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권고
- 경영개혁추진단 비리척결팀과 공조하여 비리척결과제 추진현황 검토 및 개선권고

#### 【 청렴옴부즈만 활동비중(안) 】

활동 분야	외부 청렴도 관련			내부청렴도 관련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부패 척결	조직문화, 인사·예산, 업무지시의 공정성
활동비중(100%)	25%	20%	30%	25%

### ○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 시행(월 1회)

- (정례회의) '14년도 중점 운영부문(안)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토의 및 발굴 (월1회 시행)
- (현장활동) 토지보상 관련 용지매수대책위, 용지보상현장 설명회 등 현장 활동 모니터링 (필요 시)

### 【 청렴옴부즈만 주요활동계획(안) 】

활동 분야		주요활동계획
토지보상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보상 제도개선시행 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li> <li>- 토지/물건 현장조사기준 개선에 따른 VOC 모니터링 시행</li> </ul>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매수대책위, 용지보상 현장설명회 등 참관</li> <li>- 현장 VOC 및 현업부서 의견청취</li> </ul>
시공·감리 품질안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향응제공 직접경험 근절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응제공 근절(통제) 수단 개선권고</li> </ul> </li> <li>- 품질 및 안전관리 편의제공 직접경험 근절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공단 및 협력사) 및 기준 검토</li> <li>· 편의제공 근절(통제) 수단 개선권고</li> </ul> </li> </ul>
비리척결 과제 추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비리척결 과제(경영개혁추진단, 비리척결팀) 검토 및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영상 전송장치 유착·가격 부풀리기 의혹 규명 및 제도 개선 등 15개 과제</li> </ul> </li> </ul>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업무청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청렴도 악화에 따른 인사·예산(업무추진비)·부당업무 지시 근절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업무 부패취약부문</li> <li>· 예산(업무추진비)집행 투명성</li> <li>·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li> </ul> </li> </ul>

## 부 록

## **부록1: 2013년도 청렴옴부즈만 회의 세부 운영현황**

## 2013년도 청렴옴부즈만 회의 세부 운영현황

### □ 정례회의: 12회

회차	일시	내용	비고
제 53차	'13.01.15	- 2012년 청렴도 측정결과보고 - 설계자문위원회관련 권고의견제시	- 설계자문위원회 관련 권고 4건 - 현장설계변경 관련 권고 2건
제 54차	'13.02.19	- 설계자문위원회운영지침 개정(안)검토 - 호남고속철도 공익신고 조사 논의	- 설계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조치완료 - 공익신고 처리 내용 및 사진 확인
제 55차	'13.03.26	- 공익신고 관련 현장관계자 조사(질의) -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토의	- 공익신고 옴부즈만 협조체계 구축 - 공익신고 관련 옴부즈만 활동범위 확대 권고 1건
제 56차	'13.04.16	- 옴부즈만 운영지침 개정(공익신고 관련) 검토 - 협력사 부패행위 제재(안) 검토	- 하도급사 부패행위의 통제 문제
제 57차	'13.05.21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관련 검토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관련 검토	- 업무추진비 공개 등 권고 3건 - 호남고속철 설계변경 심의결과 검토
제 58차	'13.06.04	- 원주~강릉 현장설계변경심의자료 검토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검토	- 설계변경심의 안건 현황 검토 - (주) 한국궤림 청렴도평가 검토
제 59차	'13.06.18	- 원주~강릉 현장설계변경심의결과 검토 -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 총사업비 협의결과 등 내용 검토 -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 공단 규정에 반영 권고 1건
제 60차	'13.07.16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토의 - 제4기 청렴옴부즈만 활동방향 논의 - CEO 옴부즈만 상견례 (감사패, 위촉장)	- 설계변경심의결과 원인 분석 (책임소재 규명 등) 권고 1건 - 옴부즈만 관련업무 감사실 이관 검토
제 61차	'13.8.27	- 07~13년 권고사항 조치현황 보고 - '13년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현황분석 및 대책	- '13년8월 현재 총 70건 권고해 모두 반영 - 설계변경심의 부실별점 부과조항의 실효성에 관한 권고 1건

제 62 차	'13.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li> <li>- 공익신고지침 개정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별점 부과조항 명확성 보완 요청</li> <li>- 공익신고지침 개정안의 규범형식, 침해행위의 범위 등 재검토 권고 1건</li> </ul>
제 63 차	'13.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li> <li>- 공익신고지침 개정안 검토</li> <li>- 전관예우 근절 방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별점 부과조항 권고 조치 완료</li> <li>- 공익신고지침 재검토 권고 조치 완료</li> <li>- 공익신고 이의제기의 객관성 강화 관련 권고 1건</li> </ul>
제 64 차	'13.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지침 개정안 검토</li> <li>- 전관예우 근절방안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관련) 검토</li> <li>- 공단 비리척결과제 검토</li> <li>- 기획혁신본부장 상견례(신규위원 위촉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 이의제기의 객관성 강화관련 권고사항 조치 완료</li> <li>-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관련 권고 1건</li> </ul>

## □ 현장활동: 3회

회차	일시	내용	성과
현장설계변경심의참관	'13.8.13	· 성남~여주 복선 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수도권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옴부즈만 권고사항 실천여부 확인</li> <li>-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절차 준수 여부</li> <li>*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설계 변경의 책임소재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여부 등</li> </ul>
현장설계변경심의참관	'13.9.10	· 포항~삼척 제3,4,5공구 및 부산~울산 제2공구 설계변경심의 (영남본부)	
현장설계변경심의참관	'13.10.17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설계변경심의 (수도권본부)	

## 제53차 회의 (13.1.15)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공단 관계자 6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3층 회의실
- 안 건 : '12년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설계자문회의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권고(안) 협의

### □ 주요 회의내용

#### ○ '12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 청렴도 평가 측정모형의 전면개편으로 전체기관의 청렴도 지수 하락

구 분	2012년 (준정부기관 순위)	2011년	전년대 비	공직유관 단체 평균 (178 기관)	전체기관 평균 (627 기관)
종합청렴도	<b>8.22</b> (54위/73기관)	8.81	△ 0.59	8.37	7.86
외부청렴도	<b>8.31</b>	8.98	△ 0.67	8.71	8.10
내부청렴도	<b>8.72</b>	8.55	+ 0.17	8.01	7.85

#### ○ 설계자문위원회 관련 권고 사항(4건)

- 설계 자문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문 위원에게 반영여부 회신 명문화
- 충실한 설계자문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장은 안건 상정시 위원회는 3건 이하로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5건을 초과할 수 없음
- 설계 심의시 위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 보장
- 원 설계자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 제시
  - 설계 자문회의 시 설계사 및 책임기술자 평가제 도입

#### ○ 현장설계변경 관련 권고 사항(2건)

- 설계변경심의 안건 상정시 최대 2~3건 이상은 심의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설계자가 보유한 특허·신기술공법 등의 적용은 설계변경 반영사항에서 제외

## 제54차 회의 (13.2.19)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공단 관계자 6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3층 회의실
- 안 건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검토, 공익신고조사, 철도구조개혁과 경쟁체계 도입 등

### □ 주요 회의내용

- 설계자문위원회운영지침 관련 권고 조치현황 검토  
(53차 권고사항 4건 조치 완료)
  -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위원에게 확인
  - 1회에 3건 이하로 상정함을 원칙, 불가피한 사유로 동시에 4건 이상을 초과 할 경우는 설계자문위원을 다수로 구성
  - 자문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검토 자료를 송부
  - 설계사 평가 결과 및 개인별 업무역량 평가 시행 후 상·벌 부과 (PQ시 가감점 부여)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관련 권고 조치현황 검토  
(53차 권고사항 2건 조치 완료)
  - 부득이한 경우(규정 개정 및 해당년도의 개통사업 등에 한하여 적용)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3건 이하, 소위원회는 5건 이하 상정을 원칙으로 함
  - 설계변경 절차서 수정 검토(현행 유지)
    - 설계 변경시 설계자가 보유한 특허사항은 설계에서 배제
    -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적용 중
-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관련 공익신고 조사 논의
  -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재료 분리·공극발생

## 제55차 회의 (13.3.26)

### □ 개 요

- 참석자: 옴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 공단 관계자 3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공익신고 관련 현장관계자 조사(질의),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등

### □ 주요 회의내용

-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공익신고 사항 질의응답
  - 재료분리, 철근위치 불량 등 13개소는 시공 중에 발생한 결함으로 보수계획서에 따라 보수중임을 확인
  - (사)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옴부즈만과 협조체계 유지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 (권고사항 1건)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옴부즈만의 활동 범위 확대 및 다양한 공익신고 채널 확보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공익신고 관련 감사요구 및 시정 권고 권한 추가
    -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에 공익신고자 포상 등 반영 개정 검토

## 제56차 회의 (13.4.16)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 공단 관계자 1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협력사 부패행위 제재 검토

### □ 주요 회의내용

- 공익신고 처리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 읍부즈만과 공익신고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관련 읍부즈만 지침 개정사항 검토
  - 읍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공단이 시행 중인 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관리 전반'에서 '공단의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으로 개정
  - 권익위 공익신고 운영지침안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를 준용하여 읍부즈만의 권한을 공익신고 관련 업무까지 확대
- 협력사 부패행위 제재안 검토
  - 직접적인 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어려우니 원도급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벌점 부과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제57차 회의 (13.5.21)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공단 관계자 1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13년 「반부패경쟁력 평가」 대응방안 검토,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관련 토의

### □ 주요 회의내용

- 2013년 반부패경쟁력 평가 관련 토의 및 권고 사항(3건)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맞게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 확대
  - 공익신고자 보호 등 기반마련을 위해 지침 개정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결과 및 계획 토의
  - 호남고속철도 5~3공구 용벽 말뚝기초파일 공법변경 등 6건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참석 (13.5.14 장범수 위원 참석)
  - 현지여건, 장단점 비교 및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공법이 선정되어야 함
  - 호남고속철도 1~4 공구 마암교 유지관리 도로 신설 등 10건  
현장설계변경심의
    - 설계변경 원인 및 책임소재에 따라 원 설계사에 벌칙을 마련해야 함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제58차 회의 (13.6.4)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공단 관계자 1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원주~강릉 설계변경 심의자료 검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관련 검증 등 협의

### □ 주요 회의내용

- 원주~강릉 설계변경 심의자료 검토
  - 설계변경심의대상 5개 공구 47건 안전현황 검토
  -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3건, 소위원회는 5건 이하로 안전을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규정 개정 및 해당년도의 개통사업 등에 한하여 적용)에도 15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3차 회의 권고사항)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관련 검증 등 협의
  - 권익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내·외부 평가단 구성 확인

## 제59차 회의 (13.6.18)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공단 관계자 1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설계변경 자료 검토  
전관예우 근절 방안 관련 검토

### □ 주요 회의내용

- 원주~강릉 현장설계변경 자료 검토
  - 현장설계변경심의 개최 결과(5개공구 안전 44건)내용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자료 검토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평창정거장) 및 제8공구(진부정거장) 궤도변경 자료 검토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제10공구 지방도 456 및 어흘천 통과구간 굴착공법 변경 관련 원 설계자 의견 수렴 자료 검토
- 전관예우 근절 방안 검토 및 권고 사항(1건)
  -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공단의 자체 규정화 검토(자체 규정 반영)
  - 제18조의4(퇴직공직자에 등에 대한 행위 제한)
  -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 제60차 회의 (13.7.16)

### □ 개 요

- 참석자: 옴부즈만위원 5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이영일)  
공단 관계자 6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관련 토의  
제4기 청렴옴부즈만 활동방향 논의  
\* CEO 제4기 옴부즈만 상견례 (위촉장 수여)

### □ 주요 회의내용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관련 토의 (권고사항 1건)
  - 심의위원 중 일부가 설계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의결이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 ☞ 규정대로 책임소재 규명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시행하겠음
  -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시행하여 설계오류를 줄일 수 있는 피드백이 필요함
    - ☞ 원인분석 등을 시행하여 연초 또는 연말에 백서 발간
- 제4기 청렴옴부즈만 활동 논의
  - 제 2기 및 3기 옴부즈만 활동 현황 정리
  - 제 4기 옴부즈만 활동 방향
    - 옴부즈만의 공단 측 파트너를 종전과 같이 감사실로 함
    - 창조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 요건의 엄격화

## 제61차 회의 (13.8.27)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이영일)/공단 관계자 7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청렴읍부즈만 07~13년 권고사항 조치현황 보고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토의

### □ 주요 회의내용

- 청렴읍부즈만 07~13년 권고사항 조치현황 보고
  - 13년 8월 현재 70건의 권고사항 중 68건을 반영
    - ☞ 미반영 되었던 2건도 최근 반영 완료
  -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관련 비리감점 기준 도입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중 설계변경의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조항 존치 및 실행
- '13년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현황분석 및 대책 (권고사항 1건)
  - 5개 지역본부 설계변경심의 50건을 샘플링하여 원인분석 한 내용 검토
  - 대부분 현장여건 변동, 계획변경, 민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
  - 설계변경심의 결과서 검토 후 부실별점 부과조항에 관한 권고
  - 담당 부장이 사전에 귀책사유 등을 먼저 검토하고 심의위원에게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검증자료 제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부실별점 부과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것

## 제62차 회의 (13.10.15)

### □ 개 요

- 참석자: 읍부즈만위원 3명(정준현,장범수,김경복)  
공단 관계자 2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 지침 개정안 검토  
공익신고 지침 개정안 검토

### □ 주요 회의내용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 부실별점 부과 조항(지침 제18조)의 문제점 개선
    - (중전) 심의위원의 결과채택 후 공사 담당부장이 부실별점 부과 대상을 판단하여 심의결과 번복이 어려움
    - (개선) 실효성이 있도록 공사담당부장이 사전에 제재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위원이 심의 시 제재여부를 의결하도록 개선
  - 부실별점 부과 조항의 명확성 보완 요청
    - 담당부장과 심의위원 모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구 보완 요청
  - 설계변경의 원인을 분석한 백서 발간은 나열식이 아닌 원인·유형별 분석의 심도있는 자료로 만들 것
- 공익신고지침 개정안 검토(권고사항 1건)
  - 공익신고지침 개정안의 규범 형식, 침해행위의 범위, 신고대상, 접수절차, 공익신고센터 설치,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해 읍부즈만의 의견에 대해 재검토 할 것

## 제63차 회의 (13.11.7)

### □ 개 요

- 참석자: 옴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경복,이영일)/ 공단 관계자 4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 지침 개정안 검토  
공익신고 지침 개정안 검토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 □ 주요 회의내용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제62차 회의 요청사항 조치 완료)
  - 부실별점 부과 조항의 명확성 보완
    - 공사담당부장과 심의위원 모두가 심의 전에 제재조치의 필요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부실별점 부과조항에 대한 실효성 강화
- 공익신고지침 개정안 검토(제62차 권고사항 조치 완료 및 추가권고 1건)
  - 보상금 지급, 이의제기의 객관성 확보 등 제62차 회의 권고조치 반영 완료
  - ☞ 공익신고 이의제기 시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의 확인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권도 부여할 것
- 전관예우 근절 방안 검토
  -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
    - 공단과 타기관의 철도관련근무경력을 동일하게 인정
  -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 공단 내부위원 배제방안

## 제64차 회의 (13.12.3)

### □ 개 요

- 참석자: 음부즈만위원 5명(정준현,장범수,김경복,이영일,강현호)/공단 관계자 7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공익신고지침 개정안 검토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지속경영을 위한 공단비리척결 과제 검토
- \* 기획혁신본부장 상건례 (신규 음부즈만 위촉장 수여) 및 회의 참석

### □ 주요 회의내용

- 공익신고지침 개정안 검토(제63차 권고사항 조치 완료)
  - 공익신고 이의제기 시 객관성 강화를 위한 감사청구권 부여 권한을 포함해 지침 개정 완료
- 전관예우 근절 방안 검토(권고사항 1건)
  -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기준 개정안 검토
    - 공단 퇴직자 근무경력 인정 조항(전기·통신분야) 삭제
    - 유사용역 실적인정 비율 및 항목 조정
    - 감리용역 참여업체 유사용역실적 평가기준 하향 조정
  - ☞ 공단 퇴직자 근무경력 인정 삭제 조항 등 전체적으로 기준의 완결성이 부족하니 재검토하여 완결성을 갖추도록 할 것
- 지속 경영을 위한 공단비리척결 과제 검토
  - 공단의 경영개혁 추진방안 중 청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리척결과제를 2014년 음부즈만 회의의 주제로 삼고자 안건으로 논의

## **부록2: 2013년도 청렴옴부즈만 우수사례**

# 1.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부패행위 내·외부 통제 강화

## □ 추진배경 및 현황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의 핵심가치는 국민의 참여와 함께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패행위의 사전 통제)
- 철도사업은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공단 임직원은 물론 모든 참여자(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다.
- 그러나,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설계, 감리 용역업체 선정 시 공단 퇴직자 재취업으로 직·간접적인 부패행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전관예우 주요 문제점 분석

- 철도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 건설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발주기관 등)이 반부패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면 공단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 공단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직원은 취업제한 절차가 없고 일부 직원은 퇴직 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재취업하여 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하에, 공단 퇴직자들이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공단의 각종 정보를 수집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 청렴옴부즈만 주요 활동

- **협력사 비위면직자 현장 퇴출제 검토** (제56차 회의 '13.4.16)
  - 공단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여러 규정을 통해 협력사(원도급사, 하도급사)와 감리사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고 있지만, 협력사간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이 직접 제재(예를 들어, 하도급사의 부패행위 시 원도급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 협력사간 부패행위에 대한 하도급자의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운 만큼 원도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 자신의 책임과 위험(공단이 주의 및 벌점 부과 등으로 실효성 확보)하에 하도급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건설기본사업기본법’ 제38조의2를 위반하는 부패행위 발생 시 지자체에 위반사실 통보(영업정지·과징금 등 부과) 및 협력사 부패행위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 ○ 공단 퇴직자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검토

- 공단 퇴직자가 관련업체에 재취업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업계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 청렴옴부즈만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하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조항을 공단 자체 규정화하고,
- 관련법상 취업 제한이 없는 부장급 직원들도 퇴직 후 1년간 직무관련업체 취업 자제를 권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보다 한층 강화하여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일반조항을 신설하여 직무관련 퇴직자와 업무관련 사적만남과 정보유출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 하였다. (제59차 '13.6.18)
- 설계 및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공단 출신을 우대한다는 일부 외부지적(국정감사 등)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분야별 설계 및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렴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개정안의 완결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2014년에 공단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각종 비리 척결과제에 대해서도 청렴옴부즈만의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시·권고할 예정이다. (제63차 '13.11.18 / 제64차 '13.12.10)

## ○ 기타, 2013년 반부패·윤리경영 취약분야 검토 (제57차 '13.5.21)

- 「방만경영·비리근절과 불공정한 관행 철폐」를 위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윤리경영 추진전략의 과정에서 공단의 특정분야 취약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안을 개선·권고하였다.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의 강화 권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맞게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직무관련 위법·부당 행위 시 중징계를 적용하고 공금유용 및 횡령의 경우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의 구체성 확보를 권고

☞ 단순히 업무추진비의 액수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목적, 인원, 대상자 등의 구체적 정보를 포함해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대상도 상임이사급에서 지역본부장급까지 확대하여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 관련 검토의견 및 개선사례 예시 】

# 검 토 의 건 서

## 반부패 경쟁력 평가판권

□ 작업점

- 취약점 분석을 통해 정량적 성격의 평가항목은 만점 / 정성적인 요소는 기관장의 추진의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적극성향
- ※ 전년도 최고의 평가기관이 제시한 보고서 수집하여 우리와 것과 비교 분석할 필요

□ 지표별 배경항목과 우선분석 대상의 선정

○ 지표 중 배경비율이 높은 항목에 대한 집중 분석과 제도개선 추진

-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평가자료 중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18) > 반부패 인프라구축 : 정책토론회 성실히 진행하고,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등 각 (13.5)
- ※ 공통점 : 부패유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외부의 의견을 반영한 규정제정/제개정(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율과 아울러 정책토론회 성실히 진행하고 등) 등 가치 성과 기대가능)을 통한 부패방지 인프라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내부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내 외부로부터의 공익신고의 용이성 보장장치 마련(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과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등) 등 가치 성과 기대가능)
-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거나 청렴도 평가가 가장 나쁜 사항과 관련한 규정제를 중심으로 내 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 개정작업 진행하고 그 성과를 관리 // 공익신고제와 신속한 확정

○ 전년도 취약부분의 분석과 제도개선 추진

- 4.3.1 반부패 자율협력활동 실적(8.64) > 3.3. 반부패 자율사법 추진: 부패위험분야 집중개선 등 각 (7.75)

□ 기타

- 중저대수와 관련한 민원의 적극적 재검토 필요
- ※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기계농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 경지정리사업을 할 당시와 기계농업을 대비하여 600평단위로 경지를 정리한 점을 고려하여 잔여지에 대한 확장수용 보다 적극 검토 필요
- 노선변경이나 풍경변경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색안경
- ※ 가급적 공사발주 이후에는 당초계획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
- 입법예고제 도입을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한 청렴의지 확산
- ※ 규정제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 및 시공업체 등에 대한 입법예고제 실시하여 문서로 의견 수렴할 필요 있음

2013. 5. 21.

충북조만 대표 정 준 현

## (이사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3년도 3월)

### ○ 유형별 집행내역 총계

(단위:천원)

유형	건수	금액	비고
① 주요정책 추진 관련회의, 행사 등	-	-	
② 대민 대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2	87	
③ 위문, 격려 및 직원 사기진작 등	9	958	
계	11	1,045	

(기존: 유형별로 액수와 건수만 공개)

## 13년 10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사용자 : 이사장

○ 총필요

유형	건수	금액(원)
① 주요정책 관련 회의, 행사 등	1건	56,000
②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3건	317,500
③ 직원 위문, 사기진작, 부서 간 업무협의 등	7건	612,000
소 계	11건	985,500

○ 세부사용내역

사용기간 : 2013.10.5~11.4

유형	일자	사용내역	건수	금액(원)
①	2013-10-08	유관기관 관계자 업무협의	1건	185,000
②	2013-10-16	유관기관 관계자 업무협의	1건	112,500
③	2013-10-08	경의선 출발 조성공사 관련 담당직원 오찬	1건	58,000
④	2013-10-15	기획예산처 직원 간담회	1건	118,000
⑤	2013-10-17	수도권본부 개통관련 담당부장 오찬	1건	96,000
⑥	2013-10-22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1건	20,000
⑦	2013-10-23	수도권본부 처장 간담회	1건	24,000
⑧	2013-10-24	국정감사 관련 임원 회의	1건	56,000
⑨	2013-10-28	국정감사 관련 직원 오찬	1건	70,000
⑩	2013-10-29	경영성과처 직원 오찬	1건	188,000
⑪	2013-10-30	제도처 직원 오찬	1건	58,000
합 계			11건	985,500

(개선: 개별 사용내역, 건수, 금액 모두 공개)

반부패경쟁력 평가 취약분야 검토의견서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대

## □ 부패 행위 내·외부 통제 강화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당 초	개 정 안
징계양정 기준 강화	- 권익위 권고안보다 일부 완화 적용	- 권익위 권고안 보다 강화 적용 예정 (현재 의견 조회 중) • 직무관련 위법·부당 행위 시 중징계 적용 • 공금유용 및 횡령의 경우 징계양정 강화
업무추진비 공개	- 사용 유형별로 건수, 액수만 공개	- 공개내용의 구체화 및 공개 대상 확대 • 업추비 일자, 목적, 대상, 장소 공개 • 업추비 공개대상: 상임이사 → 지역본부장급까지 확대
전관예우 관련	- 관련 규제 조항 없음	- 공직자윤리법 보다 한층 강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퇴직임직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항 신설 • 부장 이상 직원 퇴직 후 1년간 직무 관련업체 취업 자제 권고 및 퇴직 전 자체 심사
	- 공단 경력과 기타 철도관련 분야 경력 차등 대우	-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공단 경력의 실적 인정 조항 삭제

## □ 개선 효과

### ○ 관련 제 규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원천 차단

- 설계, 감리 업체 선정 기술평가에 내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함으로써 공단 퇴직자와의 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단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민간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 및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와 후발업체의 입찰참여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 투명하고 청렴한 공단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 마련

- 공단 일부 임직원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관예우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하고 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던 퇴직자들과의 업무상 사적인 접촉, 발주 정보 유출, 공정 입찰 저해 의심 요인 등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전관예우 등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각종 비윤리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철도공단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설계품질 강화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 추진배경 및 현황

- 건설공사는 특성상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하며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관련업체간 유착 또는 불투명한 업무 처리 등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 철도건설 설계품질은 현장여건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 대부분 설계사의 역량 및 책임의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설계변경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설계변경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설계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및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장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청렴옴부즈만이 설계품질의 강화와 빈번한 설계변경의 방지에 나선 것은 이러한 표면적인 효과와 함께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로 공사현장 관계자는 물론 공사시행 부서에서 집단민원 등 긴급한 주민 건의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 행정 신뢰도의 훼손을 막고 각종 건설공사의 관행 및 부정부패의 이미지를 차단함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현장설계변경심의 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 □ 설계변경 주요 문제점 분석

- 설계사들의 품질향상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
  - 설계변경과 관련한 자문내용을 검토하던 중 공종별 전문시방서 및 설계편람이 개정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준은 몇 년 전의 법규 내용을 사용하고 있고, 공구별 시방서의 틀린 부분까지 일치하는 등 설계자문심의의 신뢰성과 신임이 상실되고 있었다.(제50차~51차 회의 '12.11.19. '12.12.12)

## ○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미흡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시 부실설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심의의 내실화를 통해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심의위원의 직무와 의무를 반영토록 청렴옴부즈만이 2009년에 권고하였으나,
- 최근 4년간 설계변경심의현황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제60차 회의 '13.7.16)

## □ 청렴옴부즈만 주요 활동

### ○ 설계품질 강화 및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24건의 제도 개선 권고

- 옴부즈만은 설계변경심의업무의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집중적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설계변경 심의업무 주요 제도개선 24건 권고】

분류	개선 항목	개선 주요 내용
공정성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향상	-내부직원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하고 외부 설계자문 위원으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 ('09.8.19)
	심의의결 채택 기준 명확화	-불명확한 채택기준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원안 채택 및 조건부 채택 기준 명확화 ('11.7.27)
내실화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 명확화	-설계변경 심의 시 부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책임소재 명확화 ('09.8.19)
	설계변경심의 부실화 방지	-설계변경 심의 시 한꺼번에 다수의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3건 이상 심의를 하지 않도록 제도화 ('11.4.7)
	심의절차 내실화 제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개최 3일전까지 심의위원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도록 규정화 ('12.3.9) -설계변경 심의 전 사전공사 진행방지를 위해 착공 전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명문화 ('11.4.7) -설계변경심의 시 원설계자가 의견을 첨부 또는 참석하여 발언기회를 부여받도록 명문화 ('11.7.27)
공정성 및 내실화	심의절차 및 운영방법 개선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청렴옴부즈만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 ('09.8.19)

분류	개선 항목	개선 주요 내용
효율성	설계변경심의 효율성 제고	-단순물량 증감 등 경미한 설계변경은 현장에서 설계 변경하도록 처리하고,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잦은 설계변경심의로 인한 비효율성 제고 ('11.4.7)
	심의절차 및 운영방법 개선	-심의기준을 중요, 일반, 경미 사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심의절차 신설 ('09.12.15)

- 2012년 하반기부터는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구 노반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참관을 시작으로 그 동안의 제도개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동안 간과했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시작했다.

### 청렴옴부즈만 3대 제도개선 방향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황의 철저한 검증 및 실천을 위해

- ① 부실설계 예방을 위한 설계변경심의 내실화
- ② 심의의 공정성 향상
- ③ 심의의 효율성 제고

#### ○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권고

(제53차 회의 '13.1.15)

- 「설계자문위원회의」의 설계자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원들의 충분한 숙려기간 부족 등으로 부실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의 상정안건 수를 3건 이하로만 제한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명문화하도록 하였다.
- 설계사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설계는 과다한 현장설계변경 심의건수의 증가와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원 설계자들의 책임강화 방안을 위해 공단에 설계사 평가제(평가 상·하위 5% 상·별 부과 등)를 도입도록 권고하였다.

○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원인분석을 통한 환류(Feed Back) 개선 권고

- 현장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공법변경 심의의 경우 현지여건 변화, 변경 전·후의 장·단점 비교,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선정되었는지 (제57차 회의 '13.5.21: 호남고속철도 1~5공구 설계변경 심의결과 자료 검토), 설계변경의 내실화를 위해 상정 안전수를 제한하여 처리하고 있는 지 (제58차 '13.6.18: 원주~강릉 현장설계변경심의결과 자료 검토) 등을 검토하였으며,
- 최근 수년간 설계변경심의현황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설계변경 심의 시 원인분석을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제60차 '13.7.16 / 제61차 '13.8.27 / 제62차 '13.10.15)

○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소재 및 부실벌점 부과 개선 권고

- 또한, 현실적으로 공사 담당부장이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를 가지고 단독으로 설계사의 제재여부를 판단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침의 조항을 좀 더 치밀하게 수정하였다.
- 공사담당부장과 심의위원이 심의 전 각각 별도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임의조항이 아닌 반드시 안전으로 상정·의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여 설계의 내실화를 위한 설계변경 책임소재 규명 및 부실벌점 부과조항의 실효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제61차 '13.8.27 /제62차 '13.10.15)

## □ 설계변경 관련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당 초	개 선
설계품질 향상	-설계자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설계품질 향상 관련 항목 부족	- 설계자문위원의 충실한 자문을 위한 조건 개선 • 심의 숙려기간 보장, 지적사항 반영여부 회신 명문화 • 상정 안건 수 제한 - 원 설계자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 제시 • 설계사 평가 결과 등 시행 후 상·하위 5%에 대해 상·벌점 부과
설계변경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침 제6조에 규정된 사항임에도 잘 준수되지 않고 있었음	- 지침 준수 여부 감시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참관을 통한 모니터링 - 설계변경의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백서 발간 등 피드백 실시 방안 마련 ☞ 불필요한 설계변경 방지 효과
부실벌점 부과조항	-현실적으로 공사 담당부장이 심의 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대해 단독 부실벌점 부과는 어려움	- 제재조치에 대해 담당부장과 심의위원이 각각 별도로 사전 검토가 가능해짐 - 제재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해 반드시 의결하도록 함 ☞ 부실벌점 부과조항의 실효성 강화

## □ 개선 효과

### ○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부실설계 방지 및 사업비 절감 기반 마련

- 옴부즈만들은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선 추진과 동시에 실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참관\*하여 공단의 추진 의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장의 심의위원들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설계변경의 원인을 판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설계변경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였지만, 부실설계 방지와 사업비 절감이라는 취지를 되새긴다면 설계변경 심의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현장설계변경심의 참관: 제도개선 사항 모니터링 】



성남~여주 복선 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현장설계변경심의 참관 ('13.08.13)



수서~평택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설계변경심의 참관 ('13.10.17)

### 3. 공익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 추진배경 및 현황

- 정부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단체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09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 공단도 이에 부응하고자 공익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2012년 8월 공단 내규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 그러나, 지침 제정 이후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신고 대상자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등을 이유로 약 1년간 공익신고 실적은 4건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비단 공단만의 문제가 아닌 공익신고 전체에 관한 문제였다.
-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를 선정함에 따라, 우리 공단은 청렴옴부즈만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1년간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 청렴옴부즈만 주요 활동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 강화를 위한 권고 (제55차 회의 '13.3.26)
  - 공익신고는 ‘공익(公益)’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고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 줄 공정성이 생명이다. 이에 외부 전문가로서 공단의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에게 공익신고와 관련한 사항의 감사요구와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13년 6월 청렴옴부즈만 지침 개정)

- 공단의 공익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선권고를 하였다.

####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지침(개정 '13.6.25)**

-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활동범위 확대
  - 공익신고에 대하여 청렴옴부즈만과 신고내용을 공유하고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대내·외 확보
  -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관련 사항의 감사요구 및 시정 권고

####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체 기반 마련 권고 (제57차 회의 '13.5.21)

-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은 공단이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직원들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령을 참고하여 공단의 실정에 맞게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이하 공익신고지침)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개정, 13.7.11)**

- 정부의 국정과제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강화」에 적극 부응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 포상금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
  -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한 경우에는 익명신고 허용
  - 신고자 책임감면 및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배제
  - 신고자 보호미흡 제재, 공익신고 상담, 구제 절차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근거 마련
  - 수익증대, 예산절감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결과(형벌, 영업정지, 벌금 등)에 대한 신고 보상대상 확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개정안 종합검토 (제62차 회의 '13.10.15)
  - 권익위에서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되는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익신고 운영지침」('13.9.12)을 배포함에 따라, 시달지침 30개 조항 중 청렴옴부즈만 위원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반영한 21개 조항 외에 9개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추진하였다.
  -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은 공단의 공익신고지침 중 규범형식, 침해행위의 범위, 신고대상, 접수절차, 공익 신고센터 설치,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공익신고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옴부즈만들의 의지 (제63차 회의 '13.11.7)
  -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은 공익신고지침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침의 허점을 통해 공익수호와 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이 없는지 여러 차례 공단 담당자와 회합을 하였으며
  - 특히, 공익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청렴옴부즈만의 확인 뿐만 아니라, 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권도 부여하는 등 청렴옴부즈만이 공익신고에 직접 관여하여 불편부당하게 공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개정, 13.11.18)**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시달('13.09.12)됨에 따라 공단 지침에 반영
  - 공익신고 상담 시 신분보호 조치 및 출장 상담·접수 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 등'까지 확대 및 공익신고 구제절차 안내 조항 마련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세부절차 마련 및 이의신청 시 청렴옴부즈만 확인 및 감사청구 권한 부여

## □ 공익신고지침 주요 개정사항

○ 제1개정 ('13.7.11)

주요내용	당 초	개정안	보호대상
익명신고제	- 기명(주민번호, 주소 등) 신고만 가능	-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한 경우 익명신고 가능	내부직원 외 부 인
내부직원 책임감면제	- 내부직원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 없음	-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 -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배제	내부직원
신고자 보호 미흡 제재	-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없음	-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임직원 제재(징계) 수단 마련	내부직원 외 부 인
신고보상금 확대	- 수익증대, 예산절감 시에만 보상금 지급	- 행정기관의 처분(형벌,벌금 등)에 대하여도 보상금 지급	내부직원 외 부 인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신고 포상금 없었음	- 공익침해 행위 예방 등에 기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내부직원 외 부 인

○ 제2개정 ('13.11.19)

주요내용	당 초	개정안
신고자 편의	- 출장 상담 및 접수 관련 내용 없음 - 신고자 구제관련 내용 없음	- 직원의 출장상담 및 접수 근거 마련 - 신고자 구제절차 안내 명문화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본인만 보호	- 공익신고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 증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까지 보호 확대
이의제기의 객관성 강화	- 이의제기에 대한 별도의 제3자 확인조항 없음	- 공익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옴부즈만의 확인 및 감사청구권 부여
접수 및 처리절차 구체화	- 다수 신고인에 대한 조항 없음	-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정 근거 마련

## □ 개선 효과

### ○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제도 마련

- 공익신고법이 제정된 지 이제 벌써 3년이 넘었다.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나 신고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의 책임감면과 보상이다.
- 공익신고 법이 태동한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대상 법률 및 신고자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기본 취지에 부응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필요 사항이 시달되기 이전에 청렴옴부즈만과 함께 항상 선제적으로 공익신고지침을 개선해왔다.
-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인 「청렴옴부즈만」이 공익신고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시정권고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공익신고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 것은 다른 어느 기관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는 사항으로 특기할만하다고 할 것이다.

### ○ 2012년 1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가 2013년에 11건으로 대폭 증가

- 두 번에 걸쳐 공익신고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12년 1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 건수가 '13년에 1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신고 내용도 부실시공 방지에서 철도시설 안전 및 보호지구 관리, 불법하도급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의 긍정적 효과는 계속 될 것이다.